

민주당 대선 주자 판세분석 '기싸움' 치열

조 후보 '대세론' 여론몰이 이인제·김민석 역전 장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판세를 놓고 후보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1강(조순형 후보), 2중(이인제·김민석 후보), 2약(신국환·장상 후보)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대세론'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인제·김민석 후보는 국민선거인단에 기대를 나타내며 역전을 장담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대선주자 선호도'에선 조순형(39.2%) 이인제(12.7%), 김민석(8.4%) 신국환(2.0%) 장상(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 독주현상'이 뚜렷했다.

조 후보측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전형 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1강 2중 2약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측은 또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이 조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약점으로 지적되던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반면 이인제 후보측은 선거인단 모집에서 확보한 우위를 점한 만큼 순회경선이 실시되면 조순형 대세론은 사그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거론 대변인은 "최근 마감한 제주·인천 선거인단 모집 결과, 제주에서는 6천400명의 선거인단 중 3천명만 모집했고 인천에선 1만8천900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7천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편구를 같은 여론조사를 갖고 대세론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끝"이라며 "이제는 '역(逆)대세론'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신국환 장상 후보도 순회경선을 실시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끝나지 않은 '집안싸움'

이명박 후보 '박측 세력화' 대응 고심... 시도위원장 선출도 티격태격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당내 경선 후에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집안싸움'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박근혜 전 대표측 일부 인사들이 최근 당직 인선과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 이 후보의 당 운영방식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세력화'를 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적전분열'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선 승리를 디딤돌로 일약 당내 주류로 부상한 이 후보이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화합'이란 대의명분을 내건 만큼 '반발세력'도 통크게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큰 고민거리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하게 돼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이제 대선이 목

적이니 시도당위원장 선출은 함의로(추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누구 캠프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표표 달성을 위한 것이기 당내에는 누구의 소속도 없다"고 강조했다.

차분한 어조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내심 박 전 대표측 인사들이 자신과 당 지도부의 '시도당위원장 합의추대 권고'에 반기를 들고 잇따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시도위원장 선출문제가 이 후보에게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된 셈이지만 '강수'를 두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이 후보 경선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희태 의원은 13일 "시도당위원장 선거 문제 등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권교체에 전력을 쏟아야 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최근 사태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저항세력'이 결코 박 전 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측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측근 의원은 "최근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당내 세력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시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가"며 격양된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추석 호남여론이 중요하다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여권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하는 '호남 위기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호남 위기론'이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고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야당에게 몰표를 가나을 경우 호남이 고립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예고하듯 대통령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동원 선거인단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맥 빠진 토론 등으로 저조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독자 경선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과 별리가 결합된 '신정아 파문'은 국민의 관심을 범여권 국민 경선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즉, 대선 구도가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하는 '호남 위기론'이 더욱 공감을 확대해가고있는것이다.

특히, DJ 이후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광주·전남 정치권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창출의 원동력이었던 호남 민심을 분산시키면서 '호남 위기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범여권에서는 반대 전망이 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형성된 광주·전남 민심이 대통령 민주당의 국민경선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호남에서 형성될 '한나라당 집권 불가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즉, 그동안 침묵했던 광주·전남 민심이 공식적으로 대선 정국에 표출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의 대결 구도가 구체화되는 계기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전남 민심의 선택이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선 막바지 범여권 후보단일화도 이끌어내면서 범여권 결집의 이끄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추석 연휴 이후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호남 위기론'을 불식시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tuim@kwangju.co.kr



대통령에 큰절 동백림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던 고 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 여사가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하던 중에 큰절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대운하' 안전화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범여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상임위 안전으로 몰려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기능이 정부정책의 감시인 만큼 야당 후보의 공약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대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하는 일은 국민의 관심을 받거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이 후보가 낸 공약 때문에 특정 회사의 주가가 계속 뚝 떨어질

라겠다"면서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로서 국민 삶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따져보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헌법에 나온 국회의 기능은 법률안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국정을 감시,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야당 후보를 감시비판하는 기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65석이었지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국회에서 따져본 적이 없다"면서 "공약관련 문제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후보들끼리 공방전을 벌이면 국민이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운하 안전화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신당, '이명박 때리기' 본격화

'국회 상임위 차원 의혹 검증' 집중 공세

대통합민주당은 13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다짐하며 집중공세를 나섰다.

금명간 이명박 후보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추석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신당의 '이명박 때리기' 계획이 시작된 셈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도곡동 땅, BBK 주가조작, AIG 특혜, 삼양동 DMC(디지털 미디어시티) 관련 의혹 등이 고구마 뿌리처럼 얽혀있고, 그 뿌리에는 이명박이 자리잡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놓고도 실소유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선후보 눈치를 살피는 검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또 "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67%가 도곡동 땅 의혹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책임을 물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채 이명박 후보 비호를 위한 방탄국회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신정아든 변양균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이명박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월, 광주의 럭셔리 패션공간이 열립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고급적 쇼룸공간

광주 첨단지구 폭스콘 영풍 아울렛에서
영풍매장의 점주를 모십니다.

입점문의 : 070-7430-4601~9 기간 2007년 9월 22일까지